

정기간행물사업자 발행 편집자: 이상훈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반로 242 번길 35-9. 401호 신고번호:바00002.신고일 2011.05.11.계간6호

독도소식지6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 5호를 내고 3개월이 지나 8월 되었습니다. 좀 더 좋은 내용을 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독도소식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당신도 독도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지켜야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독도사수연합회

일본의원 울릉도 방문에 관한 독도 모 단체의 입장 표명에 관한 몇 가지 견해

이는 국제법적으로 볼 때 일본 국회의원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승인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현재 대한민국의 독도점유를 실효적인 지배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독도 모 단체의 견해에 대해서 국제법 학자로서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일본의원들이 ‘외국인 자격’으로 대한민국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울릉도를 방문하는 행위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승인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현재 대한민국의 독도점유를 실효적인 지배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인가? 정확히 보아서 그렇게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아무래도 지나친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에 불과하다.

둘째로 독도는 일본의 정당한 영토이고 한국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항의하고”, “한국 측의 불법적인 점거의 행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다는 이들 일본 의원들의 공식적인 언동과 행위는 상당히 비중이 높은 일본 국가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국제법상 인정될 수 밖에 없는 데, 한국 정부가 이러한 일본 의원들의 언동을 방임(放任)하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그 법적 의미를 부정하는 공식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공격적인 영토권 주장을 묵인(acquiescence)하는 또 하나의 기록이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데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막을 명분도 없고, 막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편히 앉아있어도 되는 것인가? 어느신문의 김 xx 국제문제 대기자는 「일본 의원들 울릉도에 어서 오세요(흔저 읍서예)」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오고 싶으면 오라는 자세와 최대한의 이성(理性)과 무관심(無關心)으로 그들의 퍼포먼스를 물거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의하고 있다. 말하자면 아무 말썽 없이 울릉도 방문이 끝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그들의 방문이 언론의 요란스러운 촉각을 벗어나 아무 말썽 없이 조용히 지나가도록 바라지는 이야기다.

(려해연구소 김영구 소장)

이 글은 김영구 소장님이 쓰신 것을 본회 홈페이지 올린 것을 일부만 이곳에 올린 것이니 애국 시민들은 홈페이지에서 전부 보시고 독도문제에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토 없는 나라는 없다. 지키자 독도 영토를 편집자

누가 독도 지키기 방법 제안 하드나?

독도 지키자고 한다고 지켜지나? 아무 방법 없이 되나? “나는 나라를 위하여 독도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독도수호참여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쓰고 아래에 서명하면 독도 지켜지나? 사람이 많이 살면 독도 지켜진다. 말로만 독도 지켜야지 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독도 지키려고 노력은 안 하고 말로만 해서는 못 지키다. 독도에 사람 살게 하자는 서명운동 하자. 본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시라.

독도사수연합회의 독도정책을 제안

- 1.독도연구기관에 연구비를 많이 투자하여 심도 있는 연구로 일본의 주장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반박하며 억지를 쓰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줍니다.
- 2.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와 주거자유를 보장해서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과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 3.독도를 관광지로 개발하여 독도에서 주민이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하고, 독도는 한국의 관광지라고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 4.독도를 지킨 독도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우리 땅을 지킨 분들이 예우를 받는 것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 5.잘못 맺어진 신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주권을 회복하여 한국은 독도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을 정부가 하면 국제 법으로 유리하다)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회원 모집 중
 레이버 독도사수대 <http://cafe.naver.com/docdoinkorea.cafe> 회원 모집 중

우리가 서명운동을 안 해도 정부가 정책을 고치면 독도는 지켜질 것이고 정부가 안하면 독도는 항상 위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안하니 우리는 여론을 만들어 정부가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다. 위내용을 정부가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본회 홈페이지에서 용지다운 받아서 서명 운동하여 본회 사무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야구 보다 독도가 중요하다.

독도방파제 등 축조계획 (평면도안)(강향희 회장 제공) 색칠한부분은 이상훈 수정함



독도정상에 올라가서 북쪽 방파제로 내려오게 하고 5시간 독도에 체류하게 하면 독도주민은 관광수입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 본인이 벌여 먹어야 국제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으로 인정 된다

- 1.독도방파제를 만들어 파도로 인해 접안을 못 하는 것을 접안 하도록 한다.
- 2.동도 정상에 관광객이 올라 갈수 있게 하고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을 북쪽 방파제로 하여 관광객이 동도를 전부를 밟고 지나온 기분이 들게 한다.
- 3.북쪽 방파제에 도착 하여 서도에 바다가로 주민 숙소까지만 갈수 있게 한다. 독도에 머무는 시간 현재 30분인 것을 5시간 정도로 한다. (독도주민이 장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 수 있게 한다. 어업전진 기지를 좋다)
- 4.서도와 동도 사이에 최소한 주민들이 20가구 살 수 있도록 방 한간 부엌 한간으로 20가구 짓고 어민 7가구 횃집 4가구 기념품가게3개 수퍼3개 그 외 필요한 가게 3개정도를 만든다. 서도에는 동도 쪽 바닷가만 관광객이 머물고 그 외는 생태계를 보호한다.

정부에 독도 연구비지원 및 시민단체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1. 독도연구소에서 연구 하는 것을 지원하라. (독도박물관, 독도연구소, 동북아 역사재단 등 모두)
2. 독도관련 공무원과 연구원 연구소장 자리바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곳에 전문가가 되게 하라)
- 3.독도 지키기 운동 하는 단체들 현수막, 유인물, 상근직원을 제정 문제로 하지 못한다. (지원하라) 독도영토 보호를 목적으로 앞장 선 대표자가 사비로 현수막, 유인물 등을 만들고 한계를 느낀다. (정부와 자금 지원과 국민들의 후원이 있으면 독도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



독도시민단체대표자회의(독도NGO포럼)부산에서 하였습니다.

독도탐방행사개요

타 이 틀	독도야 사랑에! 독도 환경생와 국민운동
슬 로 겐	독도분외구.애양쓰레기 치우기 국민운동
개 최 장 소	울릉도 / 독도 일원
개 최 일 시	2011. 10.9.-10.10. (2일간)
주 직	독도NGO포럼
주 관	독도NGO 등록 단체, 독도수오연합회

사무국/ (재)한국 통일진흥원 독도 지키기 운동본부 전 화 / 02-571-1988
 부산 :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HP 010-6504-6510



독도의용수비대의 의혹제기에 대한 입법해석(上)

이동원 독도조사연구학회 부회장

독도의용수비대의 실효적 지배가 없었다면 지금도 독도는 일본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독도의용수비대의 실효적 지배 활동에 대해 민족사적·국제법적 그 의의

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본다. 독도의용수비대는 한국역사의 격변기, 즉 6.25 동란의 혼란 속에서 우리 영토를 지켰다. 이 시기는 일본인들에 의해 우리 영토 독도의 실효적 지배가 빈번하게 훼손되고 있을 때이며, 그런 시기에 홍순철 대장은 민간인 33명을 중심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해 1953년 5월 28일 오전 11시와 1953년 6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1954년 8월 23일, 1954년 11월 21일 오전 6시쯤에 거쳐 각각 독도를 침범한 일본선박을 격퇴하여 대한민국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실효적 지배행위에 대해 일부의 끊임 없는 의혹제기와 2009년 3월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을 통한 의혹제기, 서훈자에 대한 2007년 4월 감사원 지적 등에 의해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에 대해 한층 의문이 제기되면서 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훼손 내지 왜곡되는 일이 발생해 자칫 국내법 및 국제법상의 법적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격변기의 독도의용수비대가 그에 대한 철저한 행적기록과 활동 기록을 남기지 않은 데도 연유하고, 또한 그 중심에 선 홍순철 대장이 작고하고 없는 상태에서 치안연구소가 연구용역을 해 격변기의 열악한 상태를 현실의 기준에 따라 실증기록과 생존자의 진술만으로 단정 지으려한 점 및 관련결과물을



김영구 교수님 (국제법학자) 양력

한국해양대학교박물관장, 사회과학연구소장역임
 려해연구소 개소 (소장)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 자문위원
 본회 홈페이지에 자세한 양력 있습니다.
 독도사수연합회 학술고문으로 모셨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간에 대한 법률규정은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이미 수비대의활동기간에 대해 3년 8개월을 인정해 입법규정을 둠으로써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의 실익은 없다. 활동대원 수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독도의용수비대지위법 제2조 제1호는 “독도의용수비대라 함은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일체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듯 법 규정은 33명으로 명시규정을 두어 입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는 수비대장의 수기를 인정한 것이며, 해당기간에 대해서도 ‘계속하여’의 의미로 해석해 울릉도에서 보급을 담당한 사람까지 법 제1조의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폭넓게 보호하고 있는 사실은 국가보훈처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혼란시기에 독도 영유권에 대하여 확립시켜준 사실을 높이 평가하여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주권의 현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호에 (下)편 나옵니다. (下)편 홈페이지에 볼 수 있음 편집자

『1910년 韓日병합조약』 유효론과 獨島 領有權 문제3편



수많은 한국정부의 독도 관련 TF와, 새로 설립된 수많은 한국정부의 독도연구소, 새롭게 현판식을 열고 발족한 독도관련기구들이 혈세(血稅)를 쓰면서 떠들썩하게 독도 영유권을 강화(強化)한답시고 ‘주변적 활동’에 몰두하는 동안 일본은 하얗게 웃으면서 다음 단계의 결정적인 과국을 준비하고, 한국 정부는 언제나 속수무책(束手無策)이 되어 온 것이다. 그런 식으로 1996년부터 지금 2010년까지 이 어리석고 부끄러운 싸니리 오는 계속 진행되어 왔다. 즉 독도는 (적어도 국제법적인 의미로) 계속 방치(放置)되어 왔다. 그리고 방치된 국토는 국제법 법리상 결국 상실(喪失)되게 되어 있다.

2. 왜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간 過去史에 관한 法的 認識을 논의해야 하는가?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도(方途)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영토 정책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도(方途)를 시급히 강구해야만 하지만 올바른 대응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도 문제의 본질적인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규명해 두어야만 한다. 독도 문제는 확실히 해양법상 도서영유권 분쟁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일간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독도에 대한 영토적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 측의 법리적 근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905년 그들이 독도를 영토로 편입했다고 하는 사실이다. 물론 역사적인 증거가 자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영토 편입 행위 자체는 국제법적으로 전혀 성립된 적이 없는 불법적인 것이며, 그것 자체가 한국에 대한 영토적 침략 행위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영토적 침략 의도는 일본이 근대 국가로 일어서기 위한 명치유신 혁명을 하고 있을 때, 요시다 쇼이나 후쿠자와 유키찌 같은 모든 일본의 선각자들이 입을 모아 주창한 정한론(征韓論)의 핵심적 내용이다. 일본이 근대 국가로 일어서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한국을 정복(征服)하여 병합(併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병합해야 한다는 것은 당시 일본의 국가적 목표였으며 제국주의 일본이 근대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이며 전제적(前題的)인 과제였다.

(다음호에 계속)

독도사수연합회 홈페이지 교수논문 에서 본 논문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독도 이상훈

독도·동해 두 시각 “대통령 독도 가야” VS “日사기소에 현혹안돼” 입력 2011-08-13 13:29

독도, 동해 표기에 대한 일본의 역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과 일본이 진행하는 사기소에 말려들 필요 없이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독도 전문가 한국외대 이장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동국대 임영정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다.

▶ “독도 ‘실효적 지배’가 우선. 대통령이 독도로 가야” =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교수는 독도 문제와 관련, 실효적 지배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독도에 대통령이 가려 하면 관련 부처에서 막는다고 들었다”며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게 좋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국제법상에서는 결국 어느 국가가 해당 영토를 실제로 지배하는가로 갈리게 마련이다”며 “이는 주관적 요소인 ‘영유의사’와 객관적 요소인 ‘실효적 지배’로 나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영유의사는 해당 영토에 대해 확실한 영유권을 대외에 주장하고, 제3국이 간섭하려 할 경우 분명한 의사표명을 통해 이를 막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실효적 지배다. 해당 국가가 영토에 대해 주권 행위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실효적 지배는 구체적으로 한 국가가 영토에 대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등을 제 3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2005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반인의 독도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환경 보호라는 명분하에 경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입도를 허가하거나 시설·건축등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 이 교수는 “독도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방과제 및 접근 시설을 확충하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생계활동을 하게 하는 것만이 국제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는 길”이라며 “제주도는 대통령이 가도 상관 없는데 독도를 가려 하면 관계 기관에서 말린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다는 말이 통하겠는가?”고 주장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기사입니다

(지면 관계상 뉴스 하단 올리지 못함)

레이버독도사수대에 보세요.

대통령님 독도에 가세요. 가시면 세계 언론이 코리아 대통령 독도에 갔다고 나올 것입니다. 라는 글을 2009년1월6일 발행한 독도소식지2호에 있다. 정부여당에서도 대통령 독도 가시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대통령은 못 갈 것 없다. 하신 걸로 안다. 그런데 아직 대통령이 독도에 안 가시니 무슨 이유인가? 답답한 일이다. 국민들 청와대로 찾아가 말씀 드려야 하나? 국민들이 혹 생각 하는 것은 경제문제로 일본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영토문제는 다른 무슨 일보다 우선이다. 편집자.

김성환 외교 "독도 도발은 사실상 한국 재침략"

"궁극적 목표는 동해 단독 표기" 일본 정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 던져

◀ANC▶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독도문제와 관련해 재침략이라고 규정한 과거 우리 정부의 서한을 공개하며 일본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동해의 표기 문제는 단독표기가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해인 기자입니다.

◀VCR▶

김성환 장관은 독도와 관련해 1954년 일본에 보낸 외교서한을 소개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는 일본 제안에 대한 답변인 이 서한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재침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는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우리의 권리를 증명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YN▶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재침략을 의미한다." 김 장관의 발언은 '조용한 외교'를 표방했던 전례에 비춰 유례없이 강경한 것으로 과거 외교서한을 인용해 우회적으로 일본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환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동해 표기 문제는 일본 식민지배 잔재 청산 작업의 하나"라며 "지금은 동해와 일본해의 병행 표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궁극적 목표는 동해를 단독 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인입니다.



약 50년 전만해도 일본의 각료나 지방 관리들이 독도 일본 땅으로 주장하면 그 관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못 있고 자리를 내 놓게 되었다. 즉 한일간의 문제를 일으킨 벌 이었다.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독도 한국 땅 하는 日 의원은 자리를 내놓고 독도 일본 땅 하는 각료들만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도발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일본 세상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점점 독도를 침탈 하려는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일본은 침략을 그만두고 일본정부는 역사를 바로 알리고 한국의 침략과 위안부 문제 등을 해결하고 한 일 양국이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정의를 위하여 싸운다. 편집자.

"2016년 4월 10일, 독도가 일본에 점령된다?"

일본, 한미연합사 해체 뒤 기습점거, 영유권 주장 가능성 이지스 구축함 등 인근배치 완료... 군 독도 주둔 서둘러야

최종편집 2011.04.10 10:27:27
온종립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2016년 4월 10일 오전 9시. 일본 내각은 한국 정부에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의 회복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다고 통보한다. 그리고 같은 시간 독도와 인접한 일본의 마이주루 지방대(해역함대)에서는 7000톤급 이지스구축함 수 척과 3000~5000톤급 호위함들이 위용을 자랑하며 일제히 독도를 향해 전속력으로 향진한다. 상공에는 일본항공자위대의 F-3 심신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자료사진

스텔스기 편대들이 이들 함대들을 호위하는 한편 대한민국 공군의 기동을 견제한다. F-3 심신 스텔스는 지난해인 2014년 3월 개발을 마치고 2016년 초부터 실전배치된 '스텔스기 잡는 스텔스기'로 알려진 괴물이다. 일본의 전격 통보와 기습공격을 함께 받은 한국 정부는 우왕좌왕한다. 독도에는 소수의 경찰 경비 병력만 존재할 뿐이다. 동해 북방을 지키는 해군들은 북한과의 대처로 발이 묶이고, 인근 기지에는 이렇다 할만한 함정도 없는 형편이다. 눈 깜짝 할 사이에 독도를 제압한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선포하고, 준비했던 각종 자료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출한다. 이 날을 위해 일본은 오랜 전부터 매년 1~2월경 외교문서를 우리 정부에 보내면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장차 독도에 분쟁이 발생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때를 대비하여 공식적인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다. 2005년부터는 8~9월에 나오는 '방위백서'에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이 모든 것은 일본은 독도를 침탈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뤄져 왔다.

이하 생략 홈페이지에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작가가 쓴 소설은 우리가 이긴다고 되어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전 100승 이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가 일본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일본은 이지스함이 8척. 우리는 세종대왕 함과 또 한대 건조 중이다. 일본은 최신 비행기가 많다고 들었다. 독도에 군을 주둔하면 무력으로 이기나? 독도에 주민이 많이 살면 국제 법으로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자유입도 주거자유 되고 정부는 방파제등 많은 사람의 생활터전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첫 면에 정부에 요구하는 서명운동이다. 편집자

日 한류 반대 시위 "예삿일 아냐" 방심해서는 안 된다. 독도사수연합회

천지일보 2011년 08월 23일 (화) 21:42:25
박수란 기자 union@newscj.com

일부 전문가, 극우 세력 움직임 경계



▲ 21일 일본 도쿄 오다이바의 후지 TV 부근에서 일본 젊은이들이 일장기를 든 채 한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최근 일본에서 한류(韓流) 반대 시위가 잇따라 일어나는 등 일본 극우 단체들이 이를 적극 선동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은 예사로 볼 일이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도쿄 시내 오다이바에 있는 민방 후지 TV 앞에서 주최 측 추산 6000여 명이 참석해 이 방송사의 '한류편중'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일에도 면허를 취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당시에는 일장기와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 제창, 천황만세 구호까지 등장해 우익들이 시위에 관여했음을 보여줬다.

지면상 이하 올리지 못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것 보시기 바랍니다. 독도사수연합회

표어]은 국민 힘 모아 독도 사수하자

독도사수연합회 후원 해 주신 후원사

신우정공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311-4
 TEL : (051) 528-8839
 FAX : (051) 528-8861
 H.P : 011-558-4198
 E-mail : sw8818@chol.com

대표 신재식(용기) HL5 JQN

- 사출금형
- 특수금형
- 다이캐스팅
- 금형설계
- 건축자재
- 합마톤 난간대
- 배란다
- 계단, 핸드레일 관련부품

OORI PATENT 대표변리사 **조철현**
 우리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48-23 여삼빌딩 13층
 Tel.(02)556-3453 Fax.(02)557-3038
 E-mail : cho@oori.co.kr

나라사랑
 1. 독도모형
 2. 저금통기
 3. 향수통기
 "독도사랑저금통" 검색하시면됩니다
 010-9901-2853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609-809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105-22번지(진산 주차장 내)
 전화: 070-7659-7118, 전송: 051-522-7118, 폰 010-6504-6510
 월회비 1,000원 이상 회원모집
 마음만으로는 독도를 못 지킨다 너도나도 참여하자
 법인통장 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독도사수연합회(자동이체)

독도소식지 6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지금까지 편집이 잘 되지 못 하고 내용도 충실히 하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한번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나라가 없으면 국민은 없고 민족만 있을 뿐입니다. 편집을 도와주신 윤예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연락처 010-6504-6510 후원하실분 법인통장 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독도 유인도 관련
 독도에 주민이 많이 살아야 독도가 지켜진다 라는 국제 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독도문제로 국제 법 전문가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많다. 국제 법으로 유인도 라 함은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을 말하는데 사람이 경제활동을 해서 자력으로 사는 섬을 말 한다. 다시 말해서 독도에 사람이 살지만 아무 수익성이 없이 정부나 일반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서 살며 아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섬은 국제법적으로 볼 때 유인도로 인정 받을 수 없다고 들었다. 즉 독도에 우물이 하나 있다. 일반인들 독도에 물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물이 없어도 금이 나가거나 다른 수익성이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물은 사서 먹을 수고 있으니 유인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흔히들 독도에 경찰이 있으니 유인도로 생각을 한다. 경찰은 주민이 아니다. 지금은 등대지기과 다른 분 등 주민이 몇 분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독도사수연합회 독도 이상훈

日의원들, 한·일 해저터널 추진

연맹 발족기사입력 2008.02.15 18:12:29

한국과 일본을 해저터널로 연결해 열차가 다니도록 하는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일본 초당파 의원연맹이 다음달 발족한다. **지면상 생략함**

일본 섬나라를 대륙으로 연결하려면 과거의 침략 역사를 바로잡고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고 옛날에 우리 땅인 대마도를 우리나라에 돌려주고 공사비는 전액 일본이 부담하고 우리나라를 (대마도 포함) 통과하는 통행세를 한국이 내라는 액수를 낼 것을 먼저 약속하고 우리나라에 부탁 하라. 일본과 도로연결이 되면 일본은 발전하고 한국은 길만 내주는 결과가 올 것이다.

독도 주권을 추구하는 독도 이상훈